



땅끝의 겨울바다 14일 오전 전남 해남군 땅끝 앞바다가 흐린 날씨에 적막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유두석 장성군수, 올 군정 키워드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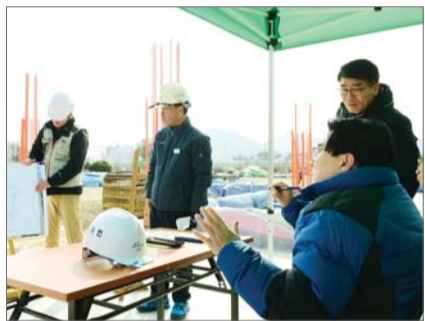
대형사업 현장 월 1~2차례 방문키로

장성군이 현장행정을 강화한다.

장성군은 올해 군정의 무게중심을 '현장'에 둔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근 2019년도 주요사업현장방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공직자들이 대형 공사나 건설 사업 현장을 매월 1~2차례씩 직접 방문해 추진 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중점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현장 방문 대상 사업은 총 29건이다. 역점사업인 ▲장성공설운동장 건립현장을 포함해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 ▲황미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성산지역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LH 공공임대주택 3차·4차 건립 ▲청운지하차도 신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유 군수와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진행된다. 행정절차나 공정률, 현장 관리상태 등을 따져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어 지연 사례가 줄고,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13일 공설운동장 공사현장을 방문한 유두석 군수(오른쪽). /장흥군

유두석 장성군수가 가장 먼저 찾은 현장은 '공설운동장'과 '상무평화공원'이다. 유 군수는 지난 13일 주요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상 애로사항이나 예상되는 문제 등을 미리 따져보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했다. 장성 공설운동장은 장성읍 기산리 황룡강 바로 옆에 들어서는 7만4911㎡규모의 대형 경기장이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상무평화공원은 삼계면 주산리 일원에 들어서는 공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분수, 연못 등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 장성=봉재영 기자

광주광역시 인권 정책, UN에 모범사례로 소개

광주광역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우수사례로 UN에 소개된다.

광주시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청으로 시의 인권제도, 인권정책, 민관협력, 신규의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세계 각 도시들의 인권관련 모범사례를 취합한 뒤 보고서로 작성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며, 향후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의 토대 위에 제도화되고 시행됐다는 점 때문이다.

인권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인권단체협력사업, 마을주민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의논해 시행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수사례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봉재영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15일 (금)
음력 : 1월 11일

수도권 날씨
0 ~ 1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25 | 해질 / 17:15

연천 -5/9, 동두천 -4/11, 가평 -4/11, 파주 -5/8, 서울 0/10, 양평 -2/11, 인천 2/8, 수원 -1/11, 용인 -1/11, 평택 -1/11, 백령도 3/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국가·지역균형발전 도모... 전북 시·군 힘 모은다

전주, 특례시 지정 위해 '사활'

시민공감대 확산 위해 연대나서 '특례시 세미나'서 당위성 확인 시·군수 회의에 안건 제출키로

전주시가 시민, 도내 타 시·군, 지역정 치권과 연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바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북지역 타 시·군과의 연대와 협력, 정부와 정치권 건의 등을 통해 전주 특례시를 실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전북의 성장거점이자 문화로 특화된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고삐를 당겨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포함해서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다.

먼저, 시는 그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 등에서 차별받아온 전북이 한 목소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되는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키로 했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

와 정치권 등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특례시 지정 추진 동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주시와 여건이 비슷한 충북 청주시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추진 동력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례로, 2월 중으로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뉘어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2019 지혜의 원탁'을 통해 전주 특례시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와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봉재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1400만원 보조... 친환경차로 미세먼지 줄인다

(전기승용차)

부산시 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 어린이집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

부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4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의 LPG신차 전환 지원, LPG 1톤 화물차를 신규 구매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은 부산의 대기환경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이며, 특히 올해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110억 원을 확보해 전기자동차 540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발전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110억 원을 확보해 전기자동차 540대를 보급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는 1600만원이 구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사업에도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3일까지이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의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50대를 지원하며,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부산=최인식 기자 remark@

장흥군 군버섯산업研 버섯종균기능사 양성 교육생 모집

장흥군은 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오는 22일까지 '버섯산업 맞춤형 버섯종균기능사 양성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장흥군이 지원한다.

장흥군은 국내 표고버섯의 주산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버섯종균기능사 양성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버섯 재배능가 및 산업체에 취,창업에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3월부터 7월까지 ▲버섯종균기능사 취득교육 ▲현장실습 및 견학교육 ▲직무·소양 교육을 진행한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맞춤형 취·창업을 지원한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전남, 中企 청년근로자 집값 부담 덜어준다

전·월세 500명에 1년동안 120만원

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가운데 전·월세 거주자 500명을 선발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전라남도가 올해 신규 도입한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전라남도 누리집을 접속해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시군 청년지원팀에 28일까지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1월 2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고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다. 또한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된다.

주거비는 임대료 등 납부사항을 확인 후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라남도는 청년 수혜자의 주거 조건과 경제적 상황에 맞게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2020년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또 신혼부부 300가구와 다자녀 가정 200가구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 최대 월 15만 원씩 36개월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청년이 36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전라남도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두 배의 금액과 이자를 함께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기존 1천500명에서 500명을 추가 선발해 지원한다.

/전남=봉재영 기자